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정책

【정당명 : 국민의당】

목 차

- | | |
|-------------------|------------------------------------------------|
| 1. 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 2. 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
| 3. 복지 |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이겠습니다. |
| 4. 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
| 5. 노동·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 6. 어르신 |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
| 7. 교육 |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
| 8.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9. 농림수산축산업 |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 10. 안전 |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

<p>정책 순위: 1</p>	<p>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p>
<p>내 용</p>	<p>I. 공정과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히든챔피언으로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독과점 경제 및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경영간섭) 등 불공정한 시장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 ■ 목표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의 갑질방지, 혁신과 패자부활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함.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품단가 연동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납품단가에 연동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도록 함. (2)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기업이 공동(컨소시엄, 규모화된 협업)으로 개발한 제품, 중소기업의 상용화 이전단계의 기술·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과 제품의 판로 확보와 성장기반을 마련. (3) 이익공유제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기업 이익을 협력업체와 배분하여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도입기업 세제혜택 제공. (4)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를 확대하며,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 및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

<p>정책 순위: 1</p>	<p>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p>
	<p>(5) 패자부활 기회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창업초기 단계 벤처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함.</p> <p>(6) 국가특허 및 대기업 기술 활용 제고 : 국가 R&D 예산 중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비율을 13.7%(2014년)에서 20%로 확대하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한 특허를 중소기업이 이용할 경우, 상업화 후 이익 발생 단계에서 특허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함(미국의 Bayh-Dole 법 벤치마킹).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기술을 활용하도록 핀란드 기술청의 ‘노키아 테크노폴리스 이노베이션 밀’을 한국형으로 도입하여 우수 기술 및 인력의 활용도를 높임</p> <p>(7)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 : 현재 벤처·창업 지원 부처가 6개 부처로 분산되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벤처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벤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p> <p>■ 이행기간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p> <p>■ 재원조달방안 등 추가 재원이 크지 않음</p>

<p>정책 순위: 1</p>	<p>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p>
	<p>II. 개미투자자와 소비자 보호</p> <p>■ 현황과 문제점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각종 불법 및 편법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여전히 만연함.</p> <p>■ 목표 부당한 행위로 이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 세금, 처벌 등으로 더 큰 손실을 부담하게 하여 정도경영을 촉진하고 기업범죄를 예방함</p> <p>■ 이행방법</p> <p>(1) 주주 대표소송 제도 개선 및 다중대표소송 도입 : 「상법」을 개정하여, 자회사의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확대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감면 제도를 폐지함.</p> <p>(2) 투자자 및 소비자 집단소송 활성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현행 협소한 소송사유 (분식회계, 주가조작,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허위공시)에 수시공시사항 허위공시와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포함함. 또한, 「소비자 기본법」을 개정하여, 독과점행위 및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 집단피해가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함.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기업 및 독과점기업의 배상책임을 강화하여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과 시장경쟁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함</p> <p>(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회사 파산 시 투자자를 보호함. 또한, 금융기관의 파산 시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고, 분쟁조정절차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재원은 금융기관 출연)을 마련함</p>

<p>정책 순위: 1</p>	<p>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p>
	<p>(4) 일감몰아주기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판단하는 지분요건을 간접지분을 포함하여 20%(현행: 직접지분으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로 통일하고, 규제 효과를 무력화하는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를 재정비하며, 공정위가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보호하고, 세금없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방지함.</p> <p>(5) 법 앞의 평등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사면법」을 개정하여 거액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기업 총수일가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형량 경감, 사면 등이 남발되지 않도록 함. 또한 불법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다시 회사 경영을 맡는 것을 금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기간 2016년 하반기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재원조달방안 등 추가 재원 없음

정책 순위: 1	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p>Ⅲ. 기업집단 규제 합리화</p> <p>■ 현황과 문제점</p> <p>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 경제력 집 중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제규모와 기업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갯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p> <table><tr><td></td><td>~ 2001년</td><td>2002년~2008년</td><td>2009년 이후</td></tr><tr><td>기준</td><td>상위 30개</td><td>자산 2조원 이상</td><td>자산 5조원 이상</td></tr><tr><td>기업집단</td><td>30개</td><td>2002년 : 43개 2008년 : 79개</td><td>2009년 : 48개 2015년 : 61개</td></tr></table> <p>규제대상 기업집단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금지사항 및 의무 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집단에 적용되어 과도한 기업 규제가 되고 있음.</p> <p>■ 목표</p> <p>대규모기업집단을 규모별로 2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규모별로 규 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함.</p> <p>■ 이행방법</p> <p>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현행 자산5조원 이상의 단일기준(61개그 룹)에서, 자산 10조원이상의 집단(36개그룹)과 자산 5조원~10조 원의 집단(25개그룹)으로 구분하고, 두 범주에 규제를 차등 적용하 여, 후자의 집단의 규제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p> <p>■ 이행기간</p> <p>2016년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 료함</p> <p>■ 재원조달방안 등</p> <p>추가 재원 필요 없음</p>		~ 2001년	2002년~2008년	2009년 이후	기준	상위 30개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30개	2002년 : 43개 2008년 : 79개	2009년 : 48개 2015년 : 61개
	~ 2001년	2002년~2008년	2009년 이후										
기준	상위 30개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30개	2002년 : 43개 2008년 : 79개	2009년 : 48개 2015년 : 61개										

<p>정책 순위: 1</p>	<p>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p>
	<p>IV.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IT산업이 성장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미래형 신성장 산업의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임. ■ 목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과 융합의 산업기반을 구축함. ■ 이행방법 (1) ICT와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집중투자 (2) 국가 R&D 투자조정을 통한 혁신과 융합기술 개발 기반 구축 (3) 신성장산업센터 설립, 기금조성 및 벤터 투자환경 개선 ■ 이행기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집중 추진함. ■ 재원조달방안 등 추가 재원은 정부 재정 및 민간 수혜자 부담으로 함

<p>정책 순위: 2</p>	<p>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p>
<p>내 용</p>	<p>I. 정치인 낙하산 (정피아)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하고 있으나, 정치권 인사에 대한 취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 공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저해되는 정치권 보은성 인사가 만연하고 있음 ■ 목표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금지하여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 공기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 ■ 이행방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정당의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공천신청자 및 낙선거,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는 사임 후 3년 이내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이행기간 2016년 2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입법 추진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재원조달방안 등 추가 재원 필요 없음

<p>정책 순위: 2</p>	<p>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p>
	<p>II. 국민이 법을 만들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게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p>우리 헌법은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직접민주제의 요소는 국회 차원에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 차원에서만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가 실시 중임.</p> ■ 목표 <p>국회와 중앙정치 차원에서도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소환)제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함</p> ■ 이행방법 <p>(1) 「국회법」을 개정하여, 유권자 2만 명 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의 가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를 도입함.</p> <p>(2) 「국회법」 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소환은 당해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하고, 1/3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국민에 의해 파면토록 함</p> ■ 이행기간 <p>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p> ■ 재원조달방안 등 <p>국회의원 파면에 대한 주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재정으로 충당함.</p>

<p>정책 순위: 2</p>	<p>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p>
	<p>Ⅲ. 테러위험대비와 인권침해 최소화의 방향으로 테러방지법 개정</p> <p>■ 현황과 문제점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법’ 또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법’ 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나, 19대 국회 말에 통과되었음.</p> <p>■ 목표 정부의 테러대비능력 강화와 국민 사생활 및 인권 보호의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을 개정.</p> <p>■ 이행방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1) 테러위험인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2) 국가테러대책위원회·대테러센트 등의 조직에서 국정원 이외의 조직이 집행 역할을 담당하게 함 (3)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을 갖는 것은 월권이므로 삭제함. (4) 국정원에 부여된 대테러 조사권은 조사참여권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은 동향파악권으로 축소. (5) 영장없이 전화감청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원상복구하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함.</p> <p>■ 이행기간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p> <p>■ 재원조달방안 등 추가 재원 필요 없음</p>

<p>정책 순위: 2</p>	<p>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p>
	<p>IV. 고위공직자 임금상한제와 투명한 정치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현황과 문제점</p> <p>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사이에 소득격차가 불합리하게 과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의 고액 연봉과 지나친 혜택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정치자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p> <p>■ 목표</p> <p>국회의원·장관·공공기관임원의 임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형성함</p> <p>■ 이행방법</p> <p>(1)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국회의원·장관·공공기관임원의 최고임금을 4인가족 중위소득인의 2배로 제한함. 2016년의 경우 중위소득이 월439만원이므로 고위공직자 최고임금은 월878만원(연간 1억5백만원)으로 설정됨.</p> <p>(2) 주요 선거시 한도 2배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조항 삭제</p> <p>(3)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게 함</p> <p>(4) 정당 및 국회의원의 회계보고(후원금 사용내역)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회계처리 위반 시 국고보조금 삭감 등 벌칙조항을 강화함</p> <p>■ 이행기간</p> <p>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p> <p>■ 재원조달방안 등</p> <p>추가적인 재원 필요 없고, 오히려 고위공직자 임금상한 효과로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효과 있음</p>

<p>정책 순위: 3</p>	<p>복지 /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이겠습니다.</p>
<p>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소비지출 감소 등 국가성장 잠재력이 잠식되어 대한민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 목표 사회보험·공공부조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5천만 프로젝트를 통한 복지투자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천만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나, 실손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가입자보호는 취약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손보험의 공익적 측면을 강화함 (2)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불공정 시비가 계속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로 혁신하여 불공정을 해소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3)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제도 확대 :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모형을 개발함 (4) 공공 보건의료 확충 :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보건의료기관 비중은 기관수 기준 5.6%, 병상 수 기준 9.6%에 불과함. 공공 보건의료 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설치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 (5)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 분산관리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통합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정보원, 고용정보원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정보 공유 및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여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함

<p>정책 순위: 3</p>	<p>복지 /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이겠습니다.</p>
	<p>(6)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도입 :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제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가구 1연금 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구조개혁함.</p> <p>(7)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및 크레딧 제도 확대 : 현재 출산과 군복무 등 2개영역에서만 국민연금 크레딧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음.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하여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게 하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의 인정기간을 확대하며 실업크레딧을 도입함.</p> <p>(8) 두루누리 대상자 2배 확대로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를 신규가입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확대적용함.</p> <p>(9)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 및 지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산모 전담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부모요금을 무료로 제공함</p> <p>(10)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주민자치센터 1개소 당 1개 보육시설을 원칙으로 확충하고, 보육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p> <p>■ 이행기간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p> <p>■ 재원조달방안 등 총액 연간 5천억원 추가 소요되고 이는 세출조정으로 조달함</p>

<p>정책 순위: 4</p>	<p>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p>
<p>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청년은 대학에 합격하면 천문학적 입학금과 등록금에 힘들어 하고, 학비마련과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에 힘겨워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부족한 상황임. 청년은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꿈, 희망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칠포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목표 청년 세대를 위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함 ■ 이행방법 (1)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 완화 : 학자금 대출은 2015년 10조원을 넘어서서 학생1인당 빚이 704만원에 이르러, 많은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신용유 의자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낮춰 이자부담을 완화함 (2) 국가장학금 제도 사각지대 개선 : 기계적 소득분위 산정으로 현실상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제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교내외 장학금 제도 변경시 정보 공개 및 사전고지하게 함. (3) 대학 입학금 폐지 :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입학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음.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입학금을 폐지함. (4) 청년고용보험 도입 :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중인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 청년들에게 6개월 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는 취업 후 4년에 걸쳐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함

<p>정책 순위: 4</p>	<p>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p>
	<p>(5) 청년스타트업 제도개선 : 청년창업기업들의 소규모, 판로확보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구매제도에 청년 스타트업 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창업지원 심사단에 청년기업가의 참여를 확대함.</p> <p>(6) 청년구직자 인권 강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인권보장 관련 조항(채용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수집 금지, 전형일정 사전공지 등)을 신설하고,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고용주의 갑질을 방지함.</p> <p>(7)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과 최저임금 보장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대학현장실습생 및 직업체험형 인턴 등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으로 하고, 근로감독관이 위반사례 적발시 합의를 유도하되 체불임금을 일정기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도록 함</p> <p>(8)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 의무화 :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여, 청년정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함 (현재 정당 국고보조금의 30%는 정책연구, 10%는 여성정치발전, 10%는 시도 지역 정치발전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년정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p> <p>(9) 원큐(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 「미래세대발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미래세대 특위를 설치하고, 청년의 학습권,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주거안정 등 권익증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 문제를 한번에 접근 해결할 수 있는 ‘원큐 청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함.</p> <p>(10) 청년 연령기준 조정으로 청년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지만, 사회진입 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은 사회적 환</p>

정책 순위: 4	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p>경을 고려하여 각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연령의 상한을 34세로 상향 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기간 2016년 하반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재원조달방안 등 후납형 청년고용보험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향후 4년간 4,600억원 정도 소요되며, 정부출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학자금대출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장학재단이 연 1,200억원 정도 이자수익 감소가 발생함

정책 순위: 5	노동 · 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좋은 일자리 대신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늪에 빠져있음.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

<p>정책 순위: 5</p>	<p>노동·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p>
	<p>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p> <p>■ 목표</p> <p>일자리와 임금격차해소로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p> <p>■ 이행방법</p> <p>(1) 노동회의소 설립 검토 : 「노동회의소법」을 제정하여 비조직화된 90%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를 설립함. 노동회의소는 근로자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대변, 교육, 입법청원 등의 기능을 수행함. 특히 비정규직 차별 시정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p> <p>(2)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300인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p> <p>(3)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민간사업장에 확대 적용.</p> <p>(4) 기간제 근로자 사용 휴지기 도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교체할 경우 대체인력을 6개월간 채용 금지함. 이를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억제함</p> <p>(5) 불법 파견·사내하청 근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인사와 노무관리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간주하여 노동관계법 적용.</p> <p>(6) 파견사업자 수수료 인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파견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소의 행정비용만으로 파견근로자 공급사업</p>

<p>정책 순위: 5</p>	<p>노동·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p>
	<p>을 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 수수료 인하 유도.</p> <p>(7)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전체 취업자의 약 22%에 달하는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 세부방안은 블랙컨슈머 리스트 공유, 근로자 감정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산재인정 범위 확대 등</p> <p>(8)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함.</p> <p>(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민간기업의 추가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함</p> <p>(10) 「공정임금법」 제정 : 성별 등에 따른 차이로 인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 임금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을 갖으며, 임금차별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시정을 요구하고, 임금차별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 발주공사에 명시된 공임 단가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p> <p>■ 이행기간 2016년 하반기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p> <p>■ 재원조달방안 등 육아휴직 급여 10% 인상 등과 관련하여 800억 정도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은 고용보험기금과 정부예산으로 충당</p>

<p>정책 순위: 6</p>	<p>어르신 /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p>
<p>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현재의 노년층은 가족문화의 변화와 어르신 복지의 취약으로 인하여 OECD 최고의 어르신빈곤율과 어르신자살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함. ■ 목표 어르신들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삶이 편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개척함 ■ 이행방법 (1) 고령자 빈곤 제로 시대 :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38만명과 국민연금수급자 28만명에 대한 감액(8,600억원)을 폐지하여 어르신의 생계를 보장. 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준고령자·고령자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노인일자리확대를 유도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2배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함. 또한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여 본인부담을 대폭 감소함 (3)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및 수당확대·기간연장 : 공익활동형 기준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2016년 29만 8천개에서 2020년까지 60만개로 단계적 확대하고, 어르신 일자리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며, 일자리 기간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4)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법 제정을 통하여, 어르신 일자리 개발 및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하고, 어르신 취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 선도 기업을 지원하고, 노인생산물 인증,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를 유도함. (5) 건강100세 운동교실 전국 확대 : 전국 경로당 대상으로 운동교실을 보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4천 곳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을 위해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 저하 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 식습관 등 건강교육, 운동프로그램 제공함.

<p>정책 순위: 6</p>	<p>어르신 /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p>
	<p>(6)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 수퍼 고령지역(65세 이상 30% 초과) 20곳을 선정하여, 의료급여, 복지서비스, 건강증진 사업 예산을 복지포괄보조금으로 통합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종합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며, 의료, 영양, 재가서비스 통합 제공함.</p> <p>(7)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 전체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공공 시설의 부족(2.2%)으로 서비스의 질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여, 공공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대기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직영요양시설 및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기반 공공 요양시설)을 확대함.</p> <p>(8)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쉼어 하우스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홀몸 노인'이 약 137만9000명이며 이중 약 60만명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에 경제난까지 겪는 도움이 필요한 홀몸어르신들임. 전국에 운영 중인 3만 6000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조리시설, 건강의료기, 잠자리 등을 마련하여 공동숙소로 탈바꿈하고,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p> <p>(9)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 도입 : 어르신의 취업에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나 주로 보여주기식 단발성 교육에 그치고 있고, 청년은 장기적인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대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청년-어르신 경험주고받기사업을 통해 지역의 대학생과 고교생(실업계)이 강사가 되어 어르신의 외국어, 컴퓨터, 식품과 영양, 안전과 건강관리 등 교육을 담당하게 하여 청년에게 일자리 경력을 쌓아주고, 어르신은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함</p> <p>■ 이행기간 2016년 하반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p> <p>■ 재원조달방안 등 어르신 복지 사업에 연간 1조원 추가 재원 필요하며, 이는 세출조정으로 조달함.</p>

<p>정책 순위: 7</p>	<p>교육 /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p>
<p>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사교육비는 지난해 학생 1인당 24만4천원(월)으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 또한 학업과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학생이 2015년 83.5%로 2012년 73.2%에 비해 10%p 이상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 ■ 목표 공교육 정상화와 사회약자에 대한 기회부여, 창의교육 및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통해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임.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시제도 단순화 : 대학의 수시전형 모집 비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확산되었고, 지나치게 복잡한 전형 방법으로 인해, 사교육이 비대해지고 전형 컨설턴트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전형 모집을 대폭 축소하고, 입시사설학원의 선행교육 축소를 유도함 (2) 의무교육 내실화 : 정부의 초·중학교 과정 완전 의무교육 실시 선언 이후에도 의무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중학교는 수업료 이외에도 학교급식비, 체험활동비, 물품비 등 일체를 지원함 (3)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차별과 교육양극화 심화의 방지 및 스펙 중심의 입시제도를 막기 위해 기회균등선발을 20% 수준으로 확대 하여 지역균형선발, 계층균형선발을 강화하고, 내신 상위 10% 학생에게 해당 시·도 국·공립고, 국·공립대 무시험 진학 기회를 보장함 (4)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4년간 동결 :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대학등록금 비중이 OECD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국공립대부터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함 (5) 진로·진학·취업 종합포털 “Life Mentor Studio” 구축 : 청소년기 진로모색과 향후 직업 선택은 청소년들의 교육방향 및 인생설계에

정책 순위: 7	교육 /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p>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한 상담 및 지도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Life Mentor Studio”를 구축하여, 직업별 현황, 학습체계, 훈련기관, 관련대학, 채용기관, 준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p> <p>(6)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 :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창의 기반형 학교가 필요하나, 민간 대안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임. 공립형 창의학교를 도입하고, 사교육 형태의 대안학교체계를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초·중·고 공립 대안학교를 17개 시·도별로 시범도입하여 운영하고, 자체 교육과정 개발 허용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함.</p> <p>(7) 학교폭력·따돌림 방지 :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고, 학습 분위기 저해와 교사들의 의욕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함</p> <p>(8) 학교 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 방과후 교장제 도입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학교시설을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 확대 개방하고, 학교 내에 구역별 평생교육 및 문화센터 설치, 학습동아리·강사양성·재능나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이 어우러지는 복합사회활동 공간 확보와 지역공동체 복원 도모.</p> <p>(9) 교원임용 성평등 할당제 도입 :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어, 여교사 편중이 높아지고 있음. 교원 배치 시 학교별 남녀교사 최저 성비를 30%로 규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p> <p>■ 이행기간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함</p> <p>■ 재원조달방안 등 매년 5천억원의 재원을 세출조정으로 조달함.</p>

<p>정책 순위: 8</p>	<p>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p>
<p>내 용</p>	<p>I. 성평등과 여성행복</p> <p>■ 현황과 문제점</p> <p>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격차지수가 가장 높아 사회에 갇나온 청년여성 취업부터 고위직 여성까지 모든 단계에서 유무형의 차별을 받고 있음. 또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도 사회적으로 적절히 예방되고, 치유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p> <p>■ 목표</p> <p>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없는 일터를 조성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함</p> <p>■ 이행방법</p> <p>(1) 여성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 전체 취업자의 약 22%에 달하는 감정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이들의 인권 및 건강권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임.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블랙컨슈머 리스트 공유, 근로자 감정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산재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여성 감정노동자 근로환경을 개선함.</p> <p>(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민간기업의 추가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함</p> <p>(3)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복귀 지원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전달체계 사업을 강화하고 내실화 함.</p>

<p>정책 순위: 8</p>	<p>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p>
	<p>(4) 성평등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 여성친화적 노동환경 구축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여성친화적 기업 현실화를 위한 법정노동시간 준수제를 강화함</p> <p>(5) 가정폭력 예방 강화 : 가족관계 내의 물리적, 정서적, 성적 폭력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p> <p>(6) 성범죄 피해자 보호 :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고소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2차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에 대한 무차별적 폭로 등 가해자 변호인 등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임.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를 막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미국 등 인권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피해자 증인심문절차 개선 제도(rape shield laws)를 도입함.</p> <p>(7)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성관계 몰래카메라 등의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몰래카메라 촬영, 유포 및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사이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p> <p>(8) 산모전담 간호사제 도입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 및 지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보건소 조직과 공간 등을 활용하여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산모 전담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p>

<p>정책 순위: 8</p>	<p>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p>
	<p>(9) 한부모 양육비 안정성 제고 :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이나,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83%에 이르고 있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이행강제조항을 강화하고, 공익 기금을 통해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방안을 검토함.</p> <p>■ 이행기간 2016년 하반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p> <p>■ 재원조달방안 등 산모전담간호사제 등의 사업 등에 소규모 재정 소요</p>

<p>정책 순위: 8</p>	<p>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p>
	<p>II. 장애인이 자립하고 존중받는 사회</p> <p>■ 현황과 문제점</p> <p>장애인은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의 부담이 큰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임금도 162만원으로 전체 임금 평균의 73% 수준임. 또한 교육, 이동권 등 각종 영역에서도 동일한 기본권을 획득하고 있지 못함</p> <p>■ 목표</p> <p>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으로 장애인 자립을 추진하고, 인권 차별에서 벗어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p> <p>■ 이행방법</p> <p>(1) 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은 현행 2.7%에서 3%로, 정부기관은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고용율에서 절반 이상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정상화를 검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취업 시 자격 1년 유지하게 함.</p> <p>(2) 염전노예방지법 추진 :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가니사건 및 신안 염전노예 사건 등에서 나타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보호시스템을 구축함</p> <p>(3) 차별없는 교육 : 일반교사와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의 역할을 설정하여 협력교수방법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p>

정책 순위: 8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p>(4) 장애인 이동권 :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을 대체하거나 신규 도입할 시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함</p> <p>■ 이행기간 2016년 하반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p> <p>■ 재원조달방안 등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치 않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장애인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p>

정책 순위: 9	농림수산물축산업 /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농어민 소득이 하락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고, 양극화의 진행으로 빈곤 농어촌 가구가 증가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농가 비중이 높은 상황임. ■ 목표 농어민 소득 증대로 빈곤농가를 줄이고, 농가 경영안정으로 지속적 발전과 농촌활력 증진 ■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쌀지키기 : 쌀생산량 증가와 소비부족으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농가 고통이 심화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고급미 개발 지원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쌀의 해외원조, 쌀가공식품수출, 정부공공비축 합리화 등을 추진 (2)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정책자금 인하 :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농어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가 2.5%대로 제공되면서 금리하락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 정책금리를 1.5%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함 (3) 5대민감품목 지역생산 할당제 : 5대 노지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는 기상, 수급,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가격이 급등과 폭락을 반복하여, 농가 소득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별로 생산면적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는 생산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함. (4)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농업·축산업·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법적근거없이 무역이득공유기금 조성 등 일시적 미봉책으로 대처하고 있음.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여,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축산업·수산업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도록 함

정책 순위: 9	농림수산물축산업 /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p>(5) 수산직불제 개선 : 2014년 기준 수산직불제 총액은 200억원 수준으로 농업직불제 총액(1조5천억원)에 대비하여 1.34%에 불과하고 수산직불제 대상도 피해보전, 폐업지원, 조건불리에 국한되어 있음. 수산업종사자들의 안정적 수익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양식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어민 소득 보장형 보험 등을 도입하고,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를 현행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함.</p> <p>(6)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확대 :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제도가 현행 4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형어선 선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 대상을 3톤이상 어선으로 확대하여 소형 영세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권익을 향상시킴.</p> <p>(7)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다문화가정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임. 시·군·구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민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착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 지원 사회복지사 전담제를 도입함.</p> <p>■ 이행기간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p> <p>■ 재원조달방안 등 정부재정과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하여 구성된 재원을 종합적으로 농어촌 발전에 사용함.</p>

<p>정책 순위: 10</p>	<p>안전 /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p>
<p>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과 문제점 한국경제는 지난 개발연대에 고속 압축 성장하였으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 환경 등의 영역에서 안전이 무시되어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음 ■ 목표 먹거리, 물, 환경의 총체적 안전사회 구축 ■ 이행방법 (1) 식품구제위원회 설치 및 기금 도입 : 식품으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분쟁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피해구제위원회 및 식품피해구조기금을 도입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선배상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2) 「식품위생법」 강화 :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재발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타인의 명의를 빌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며, 단속기관의 인사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속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 (3)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전국평균 수돗물 음용율은 5.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생수용 페트병 생산 등을 위해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수장 이후 구역별 ‘재정수처리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을 확대함. (4)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 중국산 수산물과 방사능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시장에 불법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인 국내수산물까지 피해를 입고 국내수산업이 침체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자율참여제로 9%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를 단계적으로 의무제로 변경함.

<p>정책 순위: 10</p>	<p>안전 /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p>
	<p>(5) 화상 경마·경륜·경정 장외 발권소 폐지 : 장외 발매소 운영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으며, 시설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을 개정하여 장외 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불편을 해소함</p> <p>(6)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확대 : 현재 10만마리가 넘는 유기견과 유기고양이를 전담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93.2%에 해당하는 343개소가 단기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유기동물보호소의 지방자치단체 직영을 확대하고, 민간위탁기관의 경우에도 지원 및 관리를 동시에 강화함</p> <p>(7) 일상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 맞벌이가구·1인가구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 또는 주택가 주변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생활에 대한 비밀유지, 범죄 예방을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 안전을 위한 주택단지 내 차량 운행 금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택배·심부름·장난감대여·일시보육·안전에스코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p> <p>(8) 미세먼지관리 : 미세먼지의 중국으로부터의 유입과 국내 발생을 막기 위해 서해안남부지역, 휴전선지역, 백령도지역 등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경로에 초미세먼지(PM2.5미만)을 관측할 수 있는 별도의 관측망을 신규 확충하고, 한-중간 대기분야 환경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를 지원함.</p> <p>(9) 환경피해구제 강화 :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는 가스유출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의한 환경피해만 구제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동차,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기존 환경오염피해 배상 절차에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환경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선배상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함</p>

정책 순위: 10	안전 /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p>(10) 택시 연비개선을 통한 환경보호 : 휘발유 및 경유차량의 연비는 대폭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LPG차량의 연비 개선은 미미하여 자원의 낭비 및 택시비 인상요인이 되고 있음. LPG엔진 튜닝 및 엔진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LPG하이브리드로 대체를 추진함</p> <p>■ 이행기간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p> <p>■ 재원조달방안 등 식품피해구조기금 및 환경피해구조기금 초기 조성시 재정 지원이 소요되나, 기금이 지출될 경우 상당부분을 구상권 행사하여 회복함.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순차적으로 연 2,000억원 예산 범위에서 사업 수행함. 택시연비사업은 택시사업자 자체부담으로 수행함.</p>